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분류지 점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

광주 광산을 야권 후보들 ‘막판 총력전’ 배수진 환경공약 · 전주연 호소문 · 구분기 각계 지지 선언 등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저마다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공약 발표와 지지선언, 대주민 호소, 지원유세 등을 앞세워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는 1일 환경 공약을 추가 발표하며 하남산업단지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배 후보는 “하남산업단지 오염 문제는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오염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취·침수 없는 시민 하천을 만들겠다”며 “영산강과 풍영정천, 장수천 등을 대상으로 약취 제거와 침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전주연 후보는 이날 소수 정당 후보의 집박함을 담은 최종 대주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거대 정당의 정치에서 서민 삶 현장의 눈물겨운 목소리는 보이지 않았다”며 “정치는 백 없고 돈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팍 흘러 입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의 한 표는 정치인 한 명을 키우는 표가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호남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구분기 후보는 이날 광주 시의회에서 각계 인사들과 함께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재동 화백과 정범구 전 주독일 대사, 김민용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주권 실현에 앞장설 후보가 필요하다”며 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비야시장과 신창·신가·침단권, 하남산업 일대를 둘러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동기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인구밀도 대도시 편중

면적 1만2364.3km² 전국 3위...인구 317만여명 5위
 1인 가구...광주 청년·전남 노인 비중 높아 맞춤 대책

전남광주특별시가 7월1일 출범 후 면적이 전국 3위로 도약하지만 인구는 대도시에 편중돼 있으며 노인부양비가 34.9명으로 전국 평균 29.3명보다 높아 돌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광주사회서비스원이 발간한 ‘광주복지브리프 제60호-통계로 보는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인구는 317만1000여명으로 경기도 1370만명, 서울특별시 930만명, 부산 323만명, 경남 319만명에 이어 전국 5위다.

면적은 1만2364.3km²로 대한민국 전체의 12%를 차지하며 경북 1만9036km², 강원특별자치도 1만6830

km²에 이어 전국 3위다. 또 전국 섬의 65%인 2165개를 보유하게 된다.

인구밀도는 km²당 244.5명으로 전국 평균 515.7명보다 낮지만 광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5.4배 높고 전남은 4분의 1 수준이어서 대도시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는 60세 이상 인구가 32.6%로 가장 많으며 40~50대 31%, 20~30대 21.2%, 20세 미만 15.2%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50.004%, 남성이 49.996%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76만7535명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기초연금 지급률이 72.3%로

전국 평균 66%보다 6.3%포인트 높아 노인 빈곤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8%로 전국 평균 40.7% 대비 10.1%포인트 높고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는 10만2905명으로 전국 재가급여의 11.1%를 차지했다.

노인부양비는 34.9명으로 생산가능인구 2.8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노인부양비 29.3명보다 높아 통합특별시 출범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인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전국 평균 5명에 비해 낮았으며 여성 1명이 가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1명으로 전국 평균 0.8명보다 높았다. 반면 조사사망률은 9.18명으로 전국 평균 7.1명보다

2.08명 높았고 자살률도 10만명당 32.5명으로 전국 평균 29.1명보다 높아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특별시의 전체 가구는 142만 7563개, 이 중 다문화 가구가 2만 5969개로 전체 가구의 1.8%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36.5%, 전남은 70세 이상 노인이 많은 37.1%로 전국 평균 36.1% 높았다.

장애인은 20만1996명으로 지적장애인이 44.6%, 청각장애인 14.9%, 지적장애인 10.3%, 시각장애인 9.7%, 뇌병변장애인 8.3% 순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는 청년, 전남은 노인 중심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정주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기 기자

환불 첫날부터 ‘탈벽’ 러시...인증샷 이어져 마케팅 논란에 1~14일 스타벅스 카드 조건 없이 전액 환불

“최근 스타벅스와 관련한 논란들을 보면서 (스타벅스 카드를)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스타벅스 광화문교보문고점에서 만난 한철희(50대)씨는 “3만원짜리 실물 카드를 환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스타벅스 카드에 대해 조건 없이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 ‘5·18 탕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제안한 조치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은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 매장은 한산한

가운데 직접 ‘무기명 실물카드’로 환불에 나서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의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실물 카드를 지참하고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해 파트너에게 환불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한 매장 관계자는 “오전부터 실물 카드 환불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이 계신다”며 “선물 등으로 실물 카드 주고받는 경우도 많아서 직접 찾아 오고 계시는데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는 본격적인 환불 인증 게시글이 게재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베이버커피에 “오늘부터 환불 시작해서 선물하려고 사두었던 기프트 카드 환불 받았다”며 현금 3만원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 1 투표용지 받음
- 2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손도장)
-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
-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 5 2차 투표용지 받음
- 6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
- 7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선거일 투표 안내

일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거주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위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캡처 등 저장 이미지 사용 불가)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nec.go.kr)에서 확인

• 투표 시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